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금 신청 안 하셨어요?

복직 6개월 뒤 '월급 25% 1년치' 지급...2명 중 1명 신청 안해 "소멸시효 없고 회사 신청도 가능" 광주고용센터 홍보 강화

육아휴직을 다녀온 근로자 2명 중 1명이 통상임금의 25%에 이르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고용센터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규모가 석 달 치 월급에 달하는데도 대상자들이 제도 존재를 몰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전담창구를 개설하는 등 홍보 강화에 나섰다.

2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광주고용센터) 관할에서는 지난해 근로자 4998명이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같은 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자는 2251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2020년에는 육아휴직 신청자가 4932

명, 사후지급금 신청자는 1897명으로 집계됐다. 육아휴직 시점과 사후지급금 신청 사이에 1년 이상의 차이가 있으나 매년 광주고용센터 관할에서만 2000~3000명이 사후지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는 게 광주고용센터 설명이다. 일부는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수치상으로는 보면 육아휴직자 2명 중 1명 이상은 사후지급금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광주고용센터 관할은 광주시 동·서·남·북구 등 4개 구와 곡성·구례·담양·장성·화순군, 나주시 등 광주전남 10개 시·군·구이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이 저조하기는 광주고용노동청 산하 광산고용센터, 목포·여수고용

센터도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노동청은 파악하고 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에 들어간 근로자가 급여(통상임금)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통상 12개월) 중 지급받고, 나머지 25% 금액은 사후에 받는 제도다. 사후지급금 신청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육아휴직 중 퇴직하지 않고 ▲복직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가능하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닌 공무원 등은 제외되며 절대다수의 민간회사 근로자는 물론 한국전력, 광주도사공사 등 공기업 직원도 신청 대상자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소멸시효가 없는 점도 특징이다.

수년 전 육아휴직을 다녀온 근로자라도 복직 후 6개월 이상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등 요건만 맞는다면 지급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근로자도, 사업주도 부담이 없다. 사후지급금 신청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 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이 사후지급 확인서를 작성해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광주고용센터 홈페이지 내 정보마당, 서식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서 제출은 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재직증명서 또는 6개월 치 급여내역 중 한 가지만 첨부하면 된다.

다만 고용센터 전산시스템에서 당장 확인이 가능한 것은 2015년도부터여서, 2011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제도 도입 당시부터 2014년까지 육아휴직을 다녀온 근로자의 경우 지급금 수령까지는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다.

광주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제도 이해 및 홍보 부족 등으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신청하지 않는 근로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근로자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주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근로자와 사업주들을 상대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민원 응대에 충실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전담창구를 개설했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

광주·전남 배전노동자 50일만에 총파업 종료

불법 하도급 근절,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50일째 총파업을 이어 왔던 광주·전남 배전 노동자들이 노사 합의안에 동의하고 파업을 종료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전기 지부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노사 잠정합의안을 찬성 70.6%로 가결하고 파업 종료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합의안에는 임금 6% 인상, 하계 유급휴가 3일 보장 등 내용이 담겼다. 조합원 투표에는 525명 중 371명이 찬성 표를 던졌다.

노조는 파업을 마무리한 뒤 이르면 오는 1일 쉼터 업무 재개할 방침이다.

노조는 지난달 8일 한전 협력업체 불법하도급 척결, 전국 평균임금 보장, 하계 유급휴가 3일 보장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 27일 새벽 담양군 담양읍 담양산업단지내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나 4개 동을 태우고 6시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소방서 추산 24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담양소방서 제공>

선거 전 과일 돌린 이승욱 전 강진군수 구속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과일 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는 이승욱 전 강진군수가 27일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이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 1대가 이 전 군수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군수는 2021년 설 명절을 앞두고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800여명에게 3500만원 상당의 사과상자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를 받고 있다. 당시 현역 군수이던 이 전 군수는 읍면장 등 공무원들에게 관용차를 이용해

사과상자를 배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공무원들은 과일상자를 선물로 받은 이들에게 "군수께 감사 전화를 드리라"고 재촉하고, 실제 상당수가 감사 전화를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같은 혐의로 당시 현직 군수이던 이 전 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기각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혐의를 보강한 뒤 이번엔 영장을 재신청했다. 이 사건 관련 입건자는 이 전 군수를 포함해 모두 21명으로 12명은 당시 읍면장 등 공무원으로 조사됐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보이스피싱 수거책 시민 신고로 검거

3200만원 중 3100만원도 회수...포상금 지급키로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거액을 쪼개기 송금하는 장면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거책이 검거됐다.

광주북부경찰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은 피해자가 전달한 현금을 총책에게 건넨 혐의(사기)로 A(6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낮 12시 40분께 보이스피싱 조

직원에게 속은 피해자에게 3201만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A씨는 광주시 북구 신용동의 한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해액을 총책에게 송금하던 중 시민의 신고로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거·송금액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은 A씨가 거액을

쪼개 송금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하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액 3201만원 중 100만원만 송금한 상황에서 A씨를 검거, 3101만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가담범을 신고한 시민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변에서 휴대폰을 보면서 입금하거나, 거액을 쪼개서 입금하는 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무안 공무원 수수 뇌물, 김산 군수 캠프로 갔나

간부공무원 두 차례 걸쳐 8000만원 건네...경찰 수사 확대

무안군 간부공무원 뇌물수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8000만원에 이르는 뒷돈이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산 군수 캠프 측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8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남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 1대는 이 사건 관련 4·5급 공무원 2명과 알선자(브로커), 상수도 설비 관련 업체 대표 등 입건자 4명과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업체 대표 측이 마련한 현금 8000만원이 김군수 측 캠프 관계자에게 건넨진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

지난 4월과 5월 각각 3000만원과 50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캠프 관계자에게 건넨 것으로, 이 과정에서 간부공무원이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공무원과 캠프 관계자는 경찰이 파악한 내용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5월 무안군 공무원 3명이 관급공사 물품공급 계약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 2명이 발주 금액의 10%를 뒷돈으로 받기로 입자와 공모하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8억원대 하수도 설비 관련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

뇌물 8000만원이 간부공무원 2명에게 흘러 들어간 사실을 확인한 데 이어, 이 돈이 김산 군수 캠프 관계자에게 전달된 사실을 새롭게 확인한 것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2022~2023 문화관광 지정축제

제15회 정남진 장흥 뽕축제

7.30(토) ~ 8.7(일) / 9일간
탐진강 및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